

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전망

전 현 준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5월 3일부터 7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 방문, 북·중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중국 측과 5개항에 합의했다. 북한측 발표가 아닌 중국측 발표만을 요약하면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① 고위층 교류 지속, ② 내정 및 외교문제, 국제 및 지역정세, 국정 운영 등 중요 공통관심사에 대한 전략적 소통 강화, ③ 경제무역협력 심화, ④ 문화, 교육, 스포츠 등 인문 교류 확대, ⑤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포함해 국제와 지역 문제에서의 협력 강화 등 5가지를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이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중국은 동북아정세의 안정에, 북한은 경제협력과 교류에 방점을 둔 합의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북·중간 합의내용은 지난해 5월과 7월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 내부에서 벌어진 논쟁과 결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해 5월 2차 핵실험 이후 북한 내부에서는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심각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뒤에 나타난 현상을 볼 때 북·중관계를 전략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9월 초 북·중경제협력과 대외무역 및 외자유치 확대를 강조한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올해 3월까지 진행된 논쟁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대외관계에서 북·중관계를 강조하는 ‘친중파’가 우세를 점하고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연방파’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리고 중국공산당 내부에서도 2009년 2차 북핵 실험 이후 북한의 후계체제와 개혁·개방을 둘러싼 내부 논쟁에서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강조한 전통파가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전략파보다 우위를 점했다. 이때부터 북한의 불안정성과 대북영향력의 한계를 고려해 중국지도부는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를 이원적으로 접근하면서 새로운 북·중관계의 틀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신대북정책’은 2009년 7월 공산당 외사영도소조(조장 후진타오), 재외공관장 회의 등을 거치면서 구체화됐다. 그 결과 ‘피로 맺은 관계’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고, 북·중관계의 발전은 ‘중국 당·정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는 입장이 공식적으로 천명됐다. 중국의 입장은 지난해 10월 초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의 평양 방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원자바오 총리 방북직후 평양주재 중국대사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 외교부의 부부장급 관료는 한반도 관련 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공개특강에서 대북정책에서의 ‘정경분리 원칙’(북핵문제와 경제협력의 분리)을 설명했다. 이 내용은 지난해 12월 15일 청융화(程永華) 주한 중국대사가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확인됐다. 청융화 대사는 인터뷰에서 “북·중 경제협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는 별개 문제”라며 “북한은 중국과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있는 이웃나라로 양국 간에는 정상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유엔 대북제재 내용과 함께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발언했다. 이 시점을 전후해 북·중간에는 당·정·군 고위급인사의 상호 방문이 연이어 이뤄졌다.

2010년 2월 11일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이 김 위원장을 면담하며 후진타오 주석의 친서를 전달했고, 2월 23일에는 북한의 김영일 국제부장이 후진타오 주석을 면담하고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북·중 정상회담은 시점만 남긴 셈이었다. 따라서 금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는 지난해 진행된 양국 내부의 논쟁과 양국간 공개·비공개 논의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북·중 합의를 통해 북한은 세 가지 현안 논의에서 일정한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는 북한은 후계문제에 대해 중국 측의 암묵적인 동의를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양국의 선대 지도자들이 손수 맺어 키워낸 전통적 우의 관계는 시대의 풍파와 시련을 겪었지만 시간의 흐름과 세대교체로 인해 앞으로 변화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후 주석은 “양국 우호관계를 시대의 흐름과 함께 발전시키고 대대손손 계승하는 것은 양국이 가진 공통된 역사적 책임”이라고 화답했다. ‘세대교체’, ‘대대손손 계승’ 등의 단어는 후계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는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비핵화에 동의하면서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평화협정 논의에서 중국의 담보를 얻어낸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 정세와 동북아 지역 형세, 6자회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그 결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 변영은 중·조 양국과 동북아 각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식”하고, “9.19 공동성명의 입장에 근거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한다는 입장에 어떤 변화도 없다”며 “각국과 함께 6자회담 재개에 유리한 조건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일단 올해 초 중국이 낸 중재안, 즉 ‘2차 북·미접촉→6자 예비회담→6자 본회담’ 순으로 6자 회담을 재개한다는 안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북한은 북핵폐기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4자회담 개최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해제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의 담보를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북한은 북·중 경제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경제인프라 건설에 중국 측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원자바오 총리는 “중·조 무역협력의 잠재력은 매우 크며 쌍방이 공동 노력과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합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변경(국경)지역의 기초시설(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해 새로운 합작 영역과 합작 방식을 찾아 양국 인민 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성과는 중국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중국의 가장 큰 요구는 역시 한반도 정세를 긴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북한측의 조치들에 대한 자제일 것이다. 김 위원장은 “수시로 혹은 정기적으로 양국 내정 및 외교에서의 중대문제와 국제 및 지역정세, 국정 운영경험 등 공통관심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의사소통”을 해 “국제 및 지역 문제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수호해야 한다”는 후진타오 주석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북한이 앞으로 3차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모든 대화의 여지를 접고 북·미, 남북관계를 ‘대결국면’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줄인 셈이다. 특히 북한 내부에서 ‘성과가 없는 더 이상의 북·미대화, 남북대화는 무의미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북·미협상과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사람들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북·중 합의는 북한 내 대남·대미강경파들의 입지를 약화시켜 한반도정세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단기적으로 이번 북·중합의에 기초해서 내부 현안과 북·미, 남북관계를 풀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우선 북한은 김정은 중심으로 한 후계체제 형성에 더욱 가속도를 낼 것이다. 현재 김정은은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국정 전반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장성택 행정부장과 김경희 경공업부장이 강력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고, 현철해, 이명수 국방위원회 국장이 보좌를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들어 노동당원을 대상으로 후계자에 대한 ‘충성의 편지’쓰기사업이 진행됐고, 김정은 우상화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그는 군과 국가사업에 이어 당 사업에도 관여 폭을 넓혀 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천안함사건’ 처리과정이 결정적인 변수이긴 하지만 북한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6자회담 재개국면으로 정세를 바꾸려 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북·미대화⇒예비회담⇒본회담’의 3단계 수순을 6자회담 관련국에 통보해 동의를 받아 놓은 상태다. 지난 4월 29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국무위원이 전화로 6자회담 재개 논의를 했으며 미중 간에는 5월 24~25일 전략경제대화가 예정돼 있어, 이를 계기로 6자회담 논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북한이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의 전제조건이었던 2차 북·미접촉, 4자회담 방안 제시, 유엔안보리의 경제제재 해제 등의 문제를 중국의 사후보장을 전제로 철회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4자회담 개최를 전제로 6자회담 재개와 진행의 상당부분을 중국측에 위임했다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북한은 6월 중으로 ‘천안함사태’가 가닥을 잡고 6월 말~7월 초쯤 되면 6자회담 정국으로 정세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될 경우 하반기에 다시 남북대화를 제안해 올 것으로 전망된다.

북·중 경제협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중국이 ‘창지투(長吉圖) 개발 계획’을 양국 경협 카드로 내세워 북한을 강하게 설득한 만큼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의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인프라 건설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중국정부의 ‘창지투 계획’은 지린(吉林)성의 창춘에서 지린, 두만강 유역을 2020년까지 경제벨트로 이어 나후지역인 동북3성의 중흥을 꾀하자는 것으로 이 계획의 실현을 위해 ‘동해 출항’을 확대하려면 북한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린성의 두만강 변경지역과 라진·청진을 잇는 경제벨트 건설, 압록강유역의 위화도와 황금평 개발, 요녕성 단둥과 신의주지역을 잇는 신압록강대교 착공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은 북·중협력을 통해 후계문제, 안보와 경제건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 부분적 개방과 외자유치를 통해 ‘경제적 실리’를 얻는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설사 ‘천안함 사건’이 북한 측의 소행으로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북·중합의 이행과 북한의 행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과 미국이 ‘선(先) 천안함, 후(後) 6자회담’으로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전략대화’가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6자회담 재개 시점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